

北韓과 周邊4國의 軍事關係

1996. 10.

鄭 永 泰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북한은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군사정책을 지향해 왔으나 실제로는 구소련 및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원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강대국들로부터의 시혜적 군사지원이 소멸되거나 거의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온 북한이 체제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를 지속 또는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북한의 안보구도

국가안보의 이론적 기본체계는 威脅, 安保對象(客體), 安保行爲者(主體)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안보 개념도 이러한 기본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유일지배체제에서 안보의 주체는 김일성(김정일) 일인이며, 안보의 객체는 김일성(김정일)정권의 이익이 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안보객체)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내부의 위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안보의 主體, 客體, 威脅이라는 세 가지 국면 모두가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정권 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안보전략을 설정해 왔다.

2. 대외적 차원의 정권안보 전략 목표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경쟁자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한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투구해 왔다. 김일성 정권이 대남 무력적화통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되고, 전 한반도 차원에서 金父子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을 북한 인민의 최대임무로 설정하여 온 것은 金父子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대내외에 요구해 왔다. 미국의 전쟁개입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의 꿈이 좌절된 데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이 김일성(김정일) 정권안보의 최대 위

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포함한 직접적인 대미 군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남북한간의 무력충돌 발생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항구적인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전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을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주체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왔다. 북한은 국제공산주의 원칙에 기초해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국가들로부터 지배받지 않기 위해 '자주성'과 '완전한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주노선 정책은 약소국(small state)이기 때문에 중국과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강대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지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미·일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최대한 이용해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과 긴밀한 우호국으로서의 동맹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이들 국가들로부터 내정간섭과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소위 '주체적'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김부자 유일지배 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3.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전개 양상

북한의 대중·대소 동맹은 쌍방 간에 지속되어 온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모순적이거나 허구적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북한은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나, 중·소분쟁은 북·소, 북·중 동맹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소 동맹관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했다. 비록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의 갈등의 틈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양다리 외교’를 펼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의 불만을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거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이 주둔군 및 군사자문단을 파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무기원조와 같은 군사적 지원에만 주로 매달려 오면서 동맹국들의 개입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미끼로 하여 동맹 강대국들의 내정간섭을 배격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최소한의 군사원조 확보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운동과 인민해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동맹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한편,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극한적인 대미 군사적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대미 접근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미 접근전략은 인민외교 추진(1969~74), 정부간 접근 교섭(1974~80), 인민외교 및 정부간 접근교섭 병행(1981~현재) 등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미 군사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의 대일 군사외교의 초점은 일본의 직접적인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거나 대비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한·미·일 공동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내 미군기지 폐쇄 및 미군철수를 위한 외교를 펼치는 한편, 남한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의 대남한 원조 또는 협력체계를 이완 또는 마비시킬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구사해 왔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미군기지화, 한·일간의 군사적 유대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 특히, 비동맹세력권을 겨냥하여 집중성토탄과 동시에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북한은 대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일본과의 비정치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일본내 좌경세력과의 연대 및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조종하여 일본의 대남한 및 대미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도록 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4.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변화 전망

중국은 對인방국 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북한을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유도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택으로 중국에 비도전적이거나 최소한 적대적이지 않은 '완충지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차원에서 구소련과 같은 대안적 지원세력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두개의 한국'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리 위주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북 접근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가능한 한 북한을 그들의 군사적 영향권 하에 묶어 두기 위해 대북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나름대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길 바라고 있지만, 러시아로부터의 대내적 간섭을 배제하고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존의 대북한 군사관계를 고려하여 시혜적 차원의 군사지원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러·북 군사관계는 ‘느슨한’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군사협력관계 형태를 유지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초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보다 북한핵문제, 미사일개발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순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미 직접적인 안보대화채널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켜 대남 우세의 공격적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군사대화채널 구축요구를 보다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찾는 경향이 짙다.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북한의 핵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더욱 부추킬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북한의

대일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차원의 대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5. 결 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 강화 과정에서 추구해 온 정권안보 중심의 정책수립 패턴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정권안보 중심의 정책수립 방향은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중국간의 군사협력관계 구축, 북·중 동맹관계 유지, 북·러 군사협력관계 구축 가능성 등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왔던 북방 3각동맹관계는 완전히 와해되기 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목 차 -

제I장 서론	1
제II장 북한의 안보구도 및 전략목표	4
1. 안보구도	5
2. 대외적 차원의 정권안보 전략 목표	11
제III장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전개 양상	30
1. 대중국 및 구소련 군사동맹 관계	31
2. 대미·일 2중적 군사관계: 적대와 접근	40
제IV장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변화 전망	49
1. 대중국 '주체적'동맹관계의 지속과 한계	49
2. 대러시아 군사협력관계	66
3. 대미 군사적 접근 확대	77
4. 대일 적대적 군사관계 지속	102
제V장 결론: 종합전망 및 평가	105
1. 북·중 군사관계	106
2. 북·러 군사관계	108
3. 북·미, 북·일 군사관계	111
4. 평 가	112

제I장 서론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안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화통일의 달성을 통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고, 대내적으로 군비증강 및 전 사회의 병영화 등과 같은 군사적 제 조치를 통하여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며,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제한적 자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어능력 확대 등을 특징을 한 군사정책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성취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적 존재를 제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金日成 父子의 유일지배기회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전군, 전민, 전국이 무장한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 어떤 군사대국도 조선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주체나라”¹⁾임을 강조하여 국제적 위신을 증대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전 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金日成 父子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해 왔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이 군사원조를 불모로 한 사회주의 대국주의적 내정간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방에서의

1) 『민주조선』, 1993.5.8.

자위'정책에 기초한 군사력 강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일본의 대북 군사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는 그들의 군비증강 필요성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군수산업을 과도하리 만큼 확충·발전시켜 옴으로써 국방에서의 자위에 기초한 군비증강정책을 견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主體性을 기반으로 한 '自主的' 군사정책을 지향해 왔으나 실제로는 구소련 및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원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혜적 군사지원이 소멸되거나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닥친 북한은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외 군사관계 특히,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를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이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온 북한이 어떻게 군사적 차원의 대외관계를 지속 또는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서 김정일 체제의 생존과 확장노력을 추구해 나갈 것인 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차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안보전략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고유의 안보구도와 전략의 목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어서 3장에서는 ‘동맹과 적대’ 개념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북한의 대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전개양상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기존의 대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결론에 가서는 종합 및 전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제II장 북한의 안보구도 및 전략목표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라는 ‘주체’와 국가이익이라는 ‘객체’ 그리고 국내외로부터의 위협과 침략이라는 ‘위협’으로 구성된다.²⁾ 안보주체는 국가이익 및 목표를 결정하며 국가이익을 해치는 위협을 간파·인식하고 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과 전략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안보주체는 국가의 유형에 따라 국민일반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또는 일인통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안보객체는 안보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일인지배자의 정권적 차원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객체 및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위협대상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나 아니면 정권적 차원의 이익이나에 따라 위협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결정된다.

요약하면, 국가안보의 이론적 기본체계는 威脅, 安保對象(客體), 安保行爲者(主體)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안보 개념도 이러한 기본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전략³⁾은 이러한 일반 안보구도하에서 형성된다. 국가안보전략

2)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하여」 (서울: 국방대학원, 1990), pp. 3~6.

3)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일반적으로 국가전략(National Security)이라 하는 데, 나라와 경우에 따라 대전략(Grand Strategy), 총체전략(Total Strategy), 국가정책(National Policy), 또

이라 함은 “국가가 당면하게 될 위협과 기회를 예견하며, 국가적 노력과 제한된 자원을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배분·운영하며,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하는 방향과 현실적 행동방책을 선택하는 것”⁴⁾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전략의 구성은 외교·안보(군사)전략, 경제전략, 정치·사회전략 등의 다양한 전략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와 같이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외적 차원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안보구도

북한은 노동당이 전체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해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우위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즉 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타 국가기관들은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추종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⁵⁾

는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외군사관계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 대외정책 차원에서 군사안보위주의 국가전략을 의미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4)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개념과 변천과정,” 「국가전략」, 제1권·제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 13.

5) 極東問題研究所 編, 「北韓全書」 上卷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101.

더우기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私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노동당의 역사는 곧 김일성·김정일의 權力掌握史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일성·김정일은 일인독재체제 형성을 위해 수십년간 권력투쟁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김일성은 수령의 지위를, 김정일은 수령후계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김일성은 사망전까지 수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총비서, 국가주석, 그리고 군권(1993년 이후 김정일에게 완전히 이양되었음)을 장악, 일인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수령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다. 당이 로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 단결의 중심이다.”⁶⁾

이와 같이 일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체제는 맑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權力複合體이다. 프리드리히(C.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 Brzezinski)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전체주의적 독재의 극단적 변형이라 하겠다.⁷⁾ 김일성은 이러한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意思決定構造를 배경으로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이끌어 냈다.⁸⁾ 북한 공산주

6)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7) 황성모 외, 「北韓體制研究」(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 95.

8) 안드레아스 크라체크 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중원문화, 1990), pp. 14~15.

의자들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해 항일유격활동 및 혁명신화를 날조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면서 金日成家の 혁명전통을 조작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로 인해 수령 김일성 의사는 最高權을 갖게 되었다. 김일성이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일으키며, 영토를 병합하고, 어떠한 외교정책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유일적 영도라는 측면에서 북한인민들은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당국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자신이 국가를 대신하여 “착취와 억압으로 부터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그리고 근로 지식인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보호한다”고 철저히 믿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안보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안보의 주체가 김일성(김정일) 개인이라고 한다면 북한안보의 객체는 김일성(김정일)정권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異意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심적 이익은 김일성 지배체제의 보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⁹⁾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래없는 일인독재체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 등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보존·확대하기 위한 수단

9) 레빈,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이홍구, 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날의 世界: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法文社, 1986), pp. 285~286.

적 요소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적인 보호·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대상은 김일성(김정일)정권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제까지 국익의 우선순위를 김일성 정권의 보호·확대에 두고 국가독립의 유지와 한반도 통일의 완수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92년 4월 9일 북한의 수정헌법 제9조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에서 보면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을 대신하고 있는 김일성정권의 강화이다. 그 이외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및 ‘조국통일’ 요소는 김일성정권이 존재하는 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들은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보호 및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 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임이 분명한 바, 북한안보의 객체는 자연히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自體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국가안보의 객체를 “그 국가체계내의 주어진 사회구조”로 인식하는 카플란(Morton A. Kaplan)¹⁰⁾의 주장에서도 입증된다.

10)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2nd ed. (New York: John Wiley Sons, 1967), p. 152.

김일성(김정일)유일지배체제(안보객체)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부적 위협 등이 지적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이용하여 집단 내의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여 동질화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주민통합과 일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 왔다. 북한안보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내부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체사상의 기능은 매우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이용 외에도 '북한식' 안보논리를 사용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對南武力赤化統一의 당위성과 외부 특히, 미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과장하여 국방자위에 기초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사회를 兵營化 함으로써 내부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다.

다음으로 북한이 직면하게 된 대외적 안보위협은 남한 및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위협을 포함한다. 북한은 남한을 그들의 무력적화통일 대상이자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그리고 미국을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경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적 간섭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해 왔다.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응해서 설립된 COMECON(Communist Economic Conference)의 회원이 되는 것조차 거부했다. 북한이 COMECON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自國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나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동구국가들 경우처럼 구소련의 전일적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中·蘇紛爭 이후부터 獨自路線을 고집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에 대해서 “큰당과 작은당은 있으나 높은당과 낮은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¹¹⁾고 선언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대외위협세력을 기본적으로 남한 및 미국으로 상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구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도 排他主義的 特性을 보여온 것을 고려할 때, 구소련 및 중국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 유지의 주요 위협세력으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1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346~347.

이상에서 북한 안보의 主體, 客體, 威脅 등의 세가지 국면 모두가 김일성(김정일)유일지배정권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및 외교 등 다양한 안보전략¹²⁾을 설정해 왔다.

2. 대외적 차원의 정권안보 전략 목표

구영록교수는 북한의 핵심적 국가이익 달성을 위한 최근까지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남한을 타도하고 정복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 개발,
 둘째, 남한의 대미·일관계 약화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셋째, 북한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중국과 구소련의 지속적인 지원.¹³⁾

첫째의 경우는 북한이 김부자 유일지배체제의 보호와 확장을 담보해 주는 대남 군사적 적화통일을 위해 상대적 우위의 대남 군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의 경우는 첫째의

12) 프랑스의 전략가인 앙드레 보프르(Andre Beaufre)장군은 전략을 군사력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및 외교적 모든 강압적 수단까지 포함한 '모든힘을 정치적 목적을 향해 운용하는 기술'로 정의한 바 있다. 이종학, 편저, 「군사전략론」 (서울: 박영사, 1992), p. 132.

13) 구영록, "한국의 안보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 47.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의 경우 대미 방어를 위해서나 대남적화통일을 위해서도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을 필요로 하나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개입과 간섭 배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북한의 '주체적' 동맹관계 유지를 의미하고 있다.

가. 대남 군사적 우위 유지 및 무력적화통일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 유일정통성 확보를 위한 경쟁자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남한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투구해 왔다. 김일성 정권은 일단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김부자의 유일지배체제를 영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북한 인민의 최대임무로 상정하여온 것은 김부자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당면목표의 하나로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적화통일 의지의 표명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해

서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남한의 적화통일을 통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달성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는 군사적 도발(6.25 전쟁도발), 정치·경제적 경쟁 및 군비경쟁의 적극적 수행 등이 지적된다. 1950년 북한의 전면적 군사도발이 의욕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미국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경제적 경쟁 또한 그동안 북한 당국에 의해 집요하게 추구되어 왔으나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1960년대 초를 기점으로 강조된 북한의 군비증강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軍需産業은 과도하리 만큼 확충·발전되었다. 즉 북한은 1960년대 이전까지 전후 기본군사체제 정비단계를 거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공격형 군사력을 위한 전력기반 조성단계 및 전환단계, 그리고 1985년부터는 공격형 군사력으로서의 전력체계 강화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¹⁴⁾ 그 결

14) 이규열, 「남북한 군비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pp. 23~98.

과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적 측면의 현격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즉 병력면에 있어서 북한은 약 105만 명으로 남한의 1.6배, 주요 장비 즉 전차, 화포, 잠수함, 함정, 전투기 등 화력면에서는 수적으로 2배 정도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북한의 전력지수는 남한의 1.4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미사일, 생화학무기, 핵무기(추정)등 대량살상 및 파괴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남한을 군사적으로 직접 위협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군사비 비교

단위: 억불, 1990년도 불변가격

구 분	'74	'76	'80	'84	'88	'92	
국방비	한 국	24.6	38.4	58.1	67.8	86.3	111.9
	북 한	28.8	33.2	40.4	45.5	46.9	55.4
투자비	한 국	-	11.6	17.2	19.7	33.0	36.9
	북 한	15.4	16.1	19.7	22.1	22.8	29.4
투자비 누계	한 국	-	15.7	77.7	149.7	267.7	407.9
	북 한	118.2	150.8	217.2	300.4	390.4	495.0

출 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5), p. 207.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기본적 대남 군사정책은 변함없이 對南 攻勢的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의 전면적 도발이나 그 이후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휴전선 일대의 땅굴 구축, 그리고 대소의 대남 군사도발 및 테러 등 실질적 차원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도발적이며 공격적 전략을 고수해 온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67년 이후부터 무력도발 회수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1968년 1월 21일 청수대 기습미수 사건,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4월 14일 EC-121기 격추사건을 통해 그들의 군사적 공격성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197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73년의 서해 5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무력시위, 1974년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공격 및 납치행위, 판문점과 휴전선 지역에서의 잇달은 무력공격, 그리고 1974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차 암살기도, 1976년 도끼만행사건, 1983년 아웅상 요인폭탄테러 사건,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등은 이를 잘 예시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대남적화전략 달성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해왔다. 실제로 김일성은 1954년 12월 23일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군대를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¹⁵⁾라고 천명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적화를 위한 공격전략 및 군비증강 의지는 유일지배체제를 특성으로 하는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하여 유화적 제안 등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대남적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책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상의 변화에 불과하였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지속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의 구조조정(군수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자원 이동)과 같은 개혁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부체제의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대남 적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 주민들의 긴장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나. 미국의 군사 영향력 배제

북한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미명하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선제공격한 한국전쟁에

15)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70~198.

서도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으로 인해 패배하고 말았다. 걸프전을 통해서도 북한은 미군의 적극적 개입이 전쟁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평범한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베트남 전쟁에서는 평화협정체결 이후 미군이 철수하게 됨으로써 북베트남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북베트남은 미국과 남베트남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남베트남의 군사력 약화를 초래케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체결로 미군을 철수케 함으로써 전쟁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군의 개입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고립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평화파괴국가로 낙인 찍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미·일안전협정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놓였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관련 조항¹⁶⁾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한·미·일 정치·군사동

16) 동조약 제4조에 “일본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양국(미·일)중 어느 일방 체약국의

맹의 복잡한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의지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요구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다. 1961년 4월 17일 북한은 박성철 외상이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유린하였으며 유엔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해치고 있다. ... 미국정부는 유엔의 이름을 사취하여 한국전을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남한을 점령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유엔기구는 헌장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군대는 물론이고 모든 외국군대를 남한으로부터 철수토록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며, 한국인들의 내부문제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인정될 수 없다.”¹⁷⁾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조약 6조에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의지를 구체화하였다.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p. 293 일본의 방위관련 조약 및 문서 참조.

17) Documents officiels de l'assemblée generale de l'Organisations des Nations Unis, Annexes, Point 21, 15 ème session (New York, 1960~1961), p.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제의(1948-88)중에서 미군(외군)철수 요구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북한이 얼마나 미군의 군사적 개입의 부정적 영향을 절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의 꿈이 좌절된데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그들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김일성 자신의 솔라즈(Solaz)의원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내가 이자리에서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¹⁸⁾

18) Stephan Solaz,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July 12~21, 1980*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참조.

<표 2> 한반도문제 관련 북한의 제의

제 의 내 용	건 수	백분율(%)
외군철수	94	30.32
병력감축	40	12.90
군비축소	30	9.68
남북군대연합	4	1.29
군사조약폐지	10	3.23
휴전협정준수촉구	6	1.93
인접유관국조정회의	4	1.29
무력불행사 및 평화협정체결	16	5.80
비핵평화제의	24	7.74
군사훈련중지	13	4.19
긴장완화·대치해소	4	1.29
미·북한평화협정체결촉구	26	8.39
남북불가침선언	8	2.58
3자회의	9	2.90
정치 및 군사당국자회의	12	3.87
민간군사조직해체	2	0.65
기 타	6	1.94
계	310	100

출 처: 평화연구원, 「북한의 군사문제 제의 자료집 (1948-1988)」 (서울: 평화문제연구원, 1989), p. 26.

북한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 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해계모니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영구히 정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체제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직접적 對美 威脅認識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및 러시아관계만 고려해 보더라도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침략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구소련이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점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간과했을 리가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의 북한 침략에는 엄청난 국제적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할 때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에 대해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함한 직접적인 대미 군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의 무력충돌 발생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개입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항구적인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전술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중국 및 구소련 '주체적' 동맹관계 유지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이 언제든지 북침할 의사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남한 및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이끌고 있는 최대의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북한은 1961년 이래 대'미제국주의' 방어와 대미 군사전략의 필요성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공유했던 중국 및 구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형제국으로서의 친밀관계를 과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두 강대국으로부터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간섭뿐만 아니라 군사적 침공과 같은 물리적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왔다. 스칼라피노 교수가 북한의 기본적인 전제 및 목표로 지적한 "위성국의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로 이행해 보려는 전통적 노력"¹⁹⁾이 바로 사회주의 강국, 특히 구소련으로부터의 독자성 확보였다. 구소련의 후원에 의해 권력장악에 성공한 김일성은 구소련의 간섭으로 인해 유일지배체제 확립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은 스탈린 사후 일어난 스탈격하운동의 열풍이 북한에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대일·대미관계,"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p. 323~324.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가 후르시초프에 의해 격하되기 시작하였으며²⁰⁾ 이러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 영향은 동구사회주의권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김일성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사태에 직면하여 2가지의 위협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 격하운동과 우상숭배 비판사조의 대북 유입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위협 인식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사태에 구소련이 무력으로 개입한 것과 같이 구소련의 대북한 물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은 소련의 무력개입을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에 대한 내심을 숨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소련의 개입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사회주의를 옹호하자”는 제하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20) 후르시초프는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의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대량 살육자,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451.

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²¹⁾고 함으로써 구소련이 북한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군사원조를 이용하거나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에서 “소위 개인숭배반대 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 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개인숭배반대운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배격”²²⁾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사조의 강제적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해 왔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외부의 물리적 개입과 외부사조의 침투에 직면하여 차단과 단절,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무장 및 물리적 힘의 축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북한의 정책지침서인 주체사상이 발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세의 개입과 외부사조 유입으로부터 김일성 정권보존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구소련의 위협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21)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사설.

22) 위의 글.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20여 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나타났다. 북한은 1980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의원동맹 대표자협의회」에서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은 그 침공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²³⁾

한편 중국은 구소련의 수정주의를 북한과 같이 거부하였지만 中國式的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文化革命을 단행하였는바, 이것 역시 동구의 市民蜂起나 다름없는 밑으로부터의 상층 엘리트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띠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敎條主義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文化革命을 비난하였다. 북한이 중국의 문화혁명의 극단적인 성격에 심한 불안을 느꼈고 이러한 문화혁명의 여파가 북한내로 파급되는 사태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²⁴⁾

실제로 북한은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敎條主義에 동조하는 내부세력들에 제동을 걸었다.²⁵⁾ 1967년 1월부터 중국이 홍위병을 통하여 공공

23) 정진위, 「北方三角關係」(서울: 法文社, 1985), p. 175.

24) 위의 책, p. 145.

25) 「로동신문」, 1966.8.12.

연히 북한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이에 맞서 중앙통신사 성명으로 중국의 북한 비난벽보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그후에도 압록강, 두만강에 확성기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물론 이러한 중국·북한 갈등관계는 1969년 7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인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것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약 4년만에 해빙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북한은 중국의 實用主義的 대내외정책이 북한내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왔다. 특히 중국의 스탈린주의 및 모택동주의 정책비판이 북한내부의 테크노크라트에게로 파급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중국의 이데올로기 퇴조와 모택동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김일성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²⁶⁾

또한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월남전쟁 등을 통하여 북한이 비록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못지않게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그들의 안보위협 인식은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위협의식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主權尊重, 大小霸權主義 反對 등을 골자로 하는 統一

26) 정진위, 「北方3角關係」, p. 193.

團結戰略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²⁷⁾

특히 북한이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 더우기 소위 <개인미신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게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나라들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²⁸⁾고 지적한 것은 중국·소련을 겨냥한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 및 대국주의자들의 ‘응당한 반격’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군 내에 중국군 고문관을 두지않았는가 하면, 북한장교들

27) 북한은 1979년 1월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침공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이 함락되자 1979년 1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은 캄보디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지배주의에 대한 반대”와 “폴포트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로동신문」, 1979.1.12; 북한 당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극도로 자제해온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 자신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타 사회주의국가 특히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 고유의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Robert Charvin,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p. 34 ft. 44 참조.

28) 「로동신문」, 1963.10.28.

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파견하는 것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이상과 같이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을 김부자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 가능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그들의 주체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왔다. 즉 북한은 국제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결속을 추구하면서도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들의 지배도 받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자주노선 정책은 약소국(small state)으로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지원의 필요성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미·일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최대한으로 이용해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하여 긴밀한 우호국으로서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내정간섭 및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소위 ‘주체적’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김부자 유일지배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동맹관계라 함은 북한이 구소련 및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강국들과 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되, 구소련이 의도하는 북한의 ‘러시아화’와 같은 ‘위성국’으로서의

29) 도널드 S. 자고리아, “대소·대중공관계,”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 349.

역할은 단호히 거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구소련은 당연히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북한 자체의 체제 특수성을 용인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구소련 또는 중국으로부터 여러 측면의 시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지원이 그들에 대한 간섭의 미끼로 변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의 양, 조건, 형태 등을 제한해 왔다. 군사적 지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이들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예속고리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군수품 및 무기의 자주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래식 무기의 경우, 북한은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한 형태의 자주생산체계를 완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

30) 북한군수산업의 자주화에 대해서는 정영태,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민수화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p. 43~47을 참조할 것.

제Ⅲ장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전개 양상

북한의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는 한·미, 미·일 동맹관계에 대항하여 중국 및 구소련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한·미, 미·일 동맹관계를 축으로 한·미·일은 상당한 정도의 동질적인 이념과 이익을 위해 비교적 조화로운 군사적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중국과 구소련은 심각한 국경분쟁과 더불어 정치·군사적 갈등을 빚어 왔으며 북한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갖는 신뢰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의 간섭 및 개입의 가능성으로 인한 체제위협에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 사회주의 강대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개입 및 간섭의 우려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중국과 구소련에 대해서 갖는 우려는 더욱 더 심각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미국의 민주화 요구와 같은 간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여 체제변화에 성공해 온 반면, 북한은 그들의 유일지배체제 및 승계체제에 대한 중국 및 구소련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

시킴이 어려운 체제 자체의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및 구소련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닌채 발전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이들 양국에 대해서 집요하게 접근전략을 구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같은 북한의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전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1. 대중국 및 구소련 군사동맹 관계

가. 동맹관계의 특성

냉전기 동북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구소련·미국과의 힘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중국이 구소련과 갈등을 빚으면서 제3의 국제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중국·구소련 3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각자 세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국제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식 국제장치가 바로 동맹(alliance)이다. 이들 3국은 동맹을 약소국들을 규제하는 장치의 하나로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은 일방통행식으로 강대국의 필요성만이 강조되는

장치는 결코 아니다. 약소국 역시 강대국과의 동맹을 이용해서 안보와 같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맹의 전통적 기능으로 힘의 취합, 동맹국의 통제, 국제질서의 증진³¹⁾ 등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째, 힘의 취합은 강대국은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소국을 자기측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약소국은 보다 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에 의한 힘의 지원을 획득하게 됨을 말한다.

둘째, 동맹국의 통제는 강대국이 동맹을 통해서 동맹세력을 자기 세력권안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의 반대급부로 약소국은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국제질서 증진은 강대국들이 국제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동맹에 가담한 국가들의 국내체제를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북한·구소련, 북한·중국, 그리고 미국·한국, 미국·일본 동맹 관계 역시 이러한 일반적 동맹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1년 구소련 및 중국과 각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전자와의 조약 제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31) George Liska, *Alliances and the Third Worl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pp. 23~43.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와의 조약 2조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양 조약은 공히 상대방을 반대하는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서로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대소련, 대중국과의 동맹은 양국사이에 지속되어 온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모순적이거나 허구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나, 중소분쟁은 북·소, 북·중 동맹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도출해 내고자 하는 이익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랜드연구소의 레빈은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경쟁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단지 제한적으로 성공해 왔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은 소련과 중공에 양다리를 걸쳐 외교함으로써 원했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얻을 수 없었으며, 또 어떤 때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예를

들면 소련원조의 전면 동결, 중국과의 국경충돌 사건 등).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들의 경쟁관계를 자국의 이익에 큰 보탬이 되도록 이용하지는 못하였다”³²⁾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과 맺은 동맹에서 전통적 동맹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 첫째,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민주주의적 연대를 통해서 획득하게 된 동맹세력의 강한 힘의 취합 결과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은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과 배타적으로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세력인 남한과 미국에 대항하는 힘의 취합 정도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둘째,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과 구소련에 대해서 북한이 제한적으로 親疎의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동맹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위한 절대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소련은 북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김일성 우상화’ 및 ‘부자권력 승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구소련의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부자권력 승계’ 등이 구소련의 북한 위성국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레빈, “북한의 대외군사관계,” pp. 293~294.

그러나 이러한 구소련의 태도는 구소련과 중국사이에 전개해 온 북한의 '양다리 외교'에 대한 불만표출의 일단이었음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구소련의 불만표출은 오히려 김일성유일 지배정권 유지라는 역기능을 낳았다. 즉 북한은 북·소, 북·중 동맹관계를 통해서 체제 내지는 정권의 안정을 구축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동맹국의 불만표출과 간섭의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내부적으로 폐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경직된 체제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이 기대하는 대내적 안정이라는 이익적 요소는 북한의 경우 적절하게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적 불안이나 정부전복활동과 관련된 동맹의 기능은 戰後의 동·서 양 진영에서 다같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의 동맹국 특히 구소련은 김일성의 권력장악 초기에 있어서는 경제·군사적인 지원과 함께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김일성 우상화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구소련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구소련의 이러한 부정적인 대북 감정은 김일성이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 북한체제 자체를 '주체주의'라는 명분하에 동맹세력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소위 '단절과 폐쇄'라는 정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주체주의'를 근간으로 한 폐쇄체제의 비효율성에서 배태된 경제침체,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의 증가로 점차적인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소동맹관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해 왔다. 비록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양다리 외교'를 펼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의 불만을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거나 성공을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나. 군사적 지원

동맹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군사지원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안보의 필요성은 약소국에 있어서 동맹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모델스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약소국은 자체의 이익과 팽창주의적 욕망 및 지역적 관심사를 위해서 강대국을 활용하는 경향을 가지며, 국내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강대국 세력을 이용하려고 한다."³³⁾ 이에 호응하여 강대국은 약소국들의 안보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안보지원 정책을

33) George Modelski, ed., *SEATO: Six Studies* (Melbourne: F. W. Chesire for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62), p. 155.

피게 된다. 예를 들면, 동맹국에 대한 주둔군 파견이라든가, 군사시설 설치 지원, 군사자문단 파견, 무기원조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이 주둔군 및 군사자문단을 파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대신 무기원조와 같은 군사적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자체의 군사적 방위를 위해서나 대남 군사적 혁명전략 차원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은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 축적을 필요로 해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안보지원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이 주둔군 및 군사자문단을 파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대신 무기원조와 같은 군사적 지원에만 주로 매달려 오면서 동맹국들의 개입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이와같이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미끼로 하여 동맹 강대국들의 내정간섭을 배격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 최소한의 군사원조 확보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중국 및 구소련의 대북 군사원조는 각각 561백만 달러, 1,796백만 달러로서 구소련은 중국보다 약 3배 정도를 더 원조하였다.³⁴⁾ 북한은 1979~81년에 중국제 Romeo Class 4척을 포함하여 1979~80년에 MIG-19 50대,

34)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44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p. 33 참조.

1980~81년에 MIG-19 80대, 1982~83에 MIG 21 40대를 확보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모방생산이나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다.³⁵⁾ 그러나 대북한 군사지원 내용면에 있어서 최신 군사장비를 비롯한 고성능무기는 주로 구소련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구소련의 대북 고성능무기 제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소련의 대북 군사이용이 증대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1984년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는 청진항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그후 합동군사훈련도 제의하는 동시에 자국함정의 남포항(서해안) 기항과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무기 이전의 댓가로 구소련의 요구를 대부분 수락하였다. 1980년대 구소련의 대북 무기이전 현황과 대북 요구의 수락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더 나아가 북한·구소련 양국 군은 상호방문 및 연합훈련도 실시하였다. 소련함대 및 비행단의 방북(85.8, 86.7, 87.5)과 북한함대 및 비행단의 訪蘇(85.5, 86.7 등), 그리고 1986년 10월 이후 세 차례의 해군 기동훈련 실시 등이 그것이다. 북·소간의 전략무기체계가 거의 통일되어 왔으며 구소련으로부터의 무기이전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³⁶⁾

35) 차영구, “북한과 중·소간의 군사협력: 북한의 대중·소 군사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흥구,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서울: 법문사, 1986) p. 322 주 20 참조.

36) 대한민국 국방부, “1990년대 북한-소련관계연구”(3차회의 평가자료, 1988. 12), pp. 20~22.

<표 3> 구소련의 대북한 무기 이전

연도	이 전 무 기 명	수 량	소련의 요구수락사항
1981	Frog-5/7 지대공미사일	15	
1982	MOG-21 전투기	40	
	MI-4 헬기	20	
1983	IL-62 수송기	1	
	Osa-1급 고속공격정	2	
1984	SA-2 지대공미사일	550	TU-16/95정찰 및 폭격기의 북한내륙통과비행 및 기착권 인정(84.12)
1985	MIG-23 전투기	50	나진항에 이어 원산항 기항권 인정(85.8)
	SCUD-B 지대공미사일	15	
	SA-3 지대공미사일	30	
1986	SU-7 전투기	10	남포항 기항권 인정(86.7)
	MI-24 헬기	50	
1987	SU-25 근접지원기	10	
	SA-5 지대지미사일	미상	

자 료: Military Balance, 1980~81, 81~82, 82~83, 83~84, 84~85, 85~86, 87~88, 88~89.

한편 1985년 코르바쵸프 등장 이후 시작된 신사고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한·소수교 이전까지 구소련과 북한간의 군사적 우호관계는 계속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군사대표단의 상호방문도 계속되었다. 구소련 군사력의 극동에서의 질

적·양적 강화는 세계적인 탈냉전·신데탕트에 반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역량으로 비추어 졌다.³⁷⁾ 그러나 이러한 구소련의 대북 군사원조는 한·소수교 및 소련내부의 ‘혁명적’ 변화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되었다.

2. 대미·일 2중적 군사관계: 적대와 접근

가. 대미 군사관계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³⁸⁾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미제는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군사빨력정책과 해외군사기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 밑에 나토, 세아토, 쉐토 및 「안쥬스동맹」 등의 침략적 군사빨

3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0~1991」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0), pp. 47~48.

38)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493.

력들을 조작하였으며 새로운 반공군사동맹들을 꾸며내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오늘 90개 나라의 령토에 무려 20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시적으로 150여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제는 이군사 기지들에 의거하여 세계도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파괴활동을 일삼고 있으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계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며 새 세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에 매달리고 있다.”³⁹⁾

여기에서 북한당국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몇가지 실체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우려이다. 일본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한 기지로 삼고 남한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은 판단해 온 것이다.

둘째,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군사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이들 군사안보협력체들은 미국의 주도로 북한의 군사적 고립을 강화하는 기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해 온 것이다.

셋째, 미국이 타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미군을 주둔

39)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13.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안보적 불안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군의 남한주둔에 대해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 당국의 대남 군사적 적화야욕을 포기토록 하는 가장 큰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러한 미군의 적대적 실체에 대해서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전략」을 표방함으로써 극단적인 대미 적대감을 드러내 왔다. 김일성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 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⁴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국가, 인민해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동맹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한편, 1968년 1월의 푸에블로호 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극한적인 대미 군사적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4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501.

동시에 북한은 대미 접근을 위한 다각도의 외교활동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위협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미 접근전략은 인민외교 추진(1969~74), 정부간 접근 교섭(1974~1980), 인민외교 및 정부간 접근 교섭 병행(1981~) 등으로 구체화되어 왔다.⁴¹⁾ 특히 북한은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미군사 외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1974년 3월 한국의 참여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미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북·미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상당히 신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즉 1954년 주

41) 특히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비자규정 내에서의 북한 체육인, 학자, 문화인의 민간차원의 미국방문 허용, 미국인의 북한 방문 제한 완화,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한 교역허용, 미국의교단과 북한외교관의 접촉완화 등의 대북한 교류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미양국은 북경에서 수차례의 참사관급 접촉을 가졌으며 이와 더불어 북·미간에는 상호교류 및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대북수출과 스포츠 교류, 재미교포와의 경제교류도 진전되기 시작한 것 역시 이때 부터였다. 북·미관계와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Moon Young Huh and Young Tai Jeung, "External Policies and Relations,"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pp. 149~208 참조.

한미군의 즉각적 철수 요구부터 시작하여,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점진적 철수(1987),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1990), 통일전까지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점진적 철수(1992)등이 그것이다.

나. 대일 군사관계

북한의 일본에 대한 안보적 우려는 미·일안보보장체계와 한·미상호안보체계에서 배태되는 군사적 위협 인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안보적 우려를 일본의 군국주의적 속성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오고 있다. 귀순자 고영환씨는 김일성이 지난 40여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 온 이념적 구호로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남조선괴뢰도당”⁴²⁾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⁴³⁾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북한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우려는 미국·일본의 군사적 유

42) 고영환,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대한민국 국방부, 「'95 북한정세세미나」 (1995) 참조.

43)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499.

대관계의 제도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즉 북한은 미·일안전보장 체계를 “미제가 일본군국주의를 급속히 재생시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하여 1954년 3월에 일본반동정부를 부추켜 꾸며낸 침략적인 군사협정”⁴⁴⁾이라 규정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통하여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급속히 재생재무장하여 아세아에서의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나타나고”⁴⁵⁾있음을 경고해 왔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 밑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광란적인 침략소동을 벌리고 있다”⁴⁶⁾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지배해 온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북한의 우려는 전혀 배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역내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치·군사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군사력 구축만으로도 북한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4)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366.

45) 위의 책, p. 1366.

46) 위의 책, p. 1367.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일안전 보장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협정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에게 모든 군사보급물자와 인적자원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보장하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을 미제의 군사공급 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이 협정을 통하여 「일본자위대」에 대한 무장공급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면서 미제의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복무하였다.”⁴⁷⁾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일본이 군수회사를 통하여 남한에 “암암리에 다수의 곡사포 및 박격포들과 대포의 부품들을 공급하였으며,” “중화기의 제조를 위한 기술문서들을 제공”⁴⁸⁾하였음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본의 지원은 남한 ‘괴뢰도당’이 전쟁과 파시즘, 특히 북한에 대한 “모험에 찬 군사도발 획책”에 고무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위한 기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직접 참가하고 있음을 들어 이것

47) 위의 책, p. 1366.

48) 「로동신문」, 1981.9.1.

을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준비에 일본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⁴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일 군사외교의 초점은 일본의 직접적인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완화 또는 대비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한·미·일의 유대관계를 통한 군사적 공동위협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일본내 미군기지 폐쇄 및 미군철수를 위한 외교를 펼치는 한편, 남한의 군사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본의 대한국 원조 또는 협력체계를 이완 또는 마비시킬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구사해 왔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군기지화, 한·일간의 군사적 유대의 위협성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적 특히, 비동맹세력권을 중심으로 성토했으며,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대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일본과의 비정치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일본내 좌경세력의 연대 및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이용하여 일본의 대한국 및 대미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도록 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⁵⁰⁾

49) 위의 글.

50) 북한의 대일관계는 1950년대 말까지의 접근 시도기를 거쳐 1978년까지 정당, 인민외교 및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를 보여 왔으며 그 이후부터 1988년까지는 정부간 교섭타진기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노태우 전대통령의 「7.7선언」과 UN총회연설이 일본 정부에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단초가 되었다. Huh and Jeung, “External Policies and Relations,” p. 167.

북한은 이러한 대일 유화적 수단 이외에도 군사력 건설을 통한 대일 위협수단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그들의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군사력의 직접적 위협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핵개발 의도는 일본의 대한국 군사적 접근을 차단 또는 완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주장⁵¹⁾이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 한국과 거의 유사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온 것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이 대일 외교적 위협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51) 中川八洋, “「労働 - 號」を迎撃できるが,” 『諸君』第25卷, 第8號 (1993.8), pp. 168~175.

제Ⅳ장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 변화 전망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갑작스런 兩大 사건으로 그들의 대내외 정책 결정에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양대 사건이란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최대의 대외적 버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체제간의 협력체계 붕괴와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김일성의 사망이 그것이었다. 전자는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후자는 북한의 권력체계가 승계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력의 과도기 상태로 빠져들게 하였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는 북·소동맹관계의 소멸 또는 변질 및 북·중동맹관계의 약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북한은 이로 인한 군사 안보적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새로운 대미·일 군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절감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추구하게 될 주변 4국과의 군사관계를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1. 대중국 '주체적'동맹관계의 지속과 한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군사적 동맹차원에서 중국의 군사적 원조 또는 협력을 수용해 오면서도 중국의 대내적 간섭

을 최소화하는 소위 「주체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대중국 관계는 김정일의 체제공고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승계자인 김정일 역시 아버지 김일성 이상으로 정권안보 차원의 대외군사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군사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구소련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 중국 역시 북·중동맹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도를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북·중동맹관계는 기존의 관계 보다 변질 또는 약화되어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적대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한과의 수교 이후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기존의 대북한 군사적 원조를 기피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가능성이 짙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희망과는 달리 「주체적」 북·중동맹관계의 지속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가. 중국의 전통적 군사지원

군사적으로 북한은 구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에 서도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외교·안보적 차

원에서 고립무원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에게 군사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 중국이 비록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북한과 체제목표상의 동질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은 김일성 개인우상숭배, 부자간 권력승계,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이것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그 어떤 국가 보다도 북한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향후에도 북한의 고립으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구소련 붕괴 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어떠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전통적 대북 관계를 고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첫째, 중국은 동북아 패권 추구를 위해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공동유대관계의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의 와해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대내외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중국이 해군력 강화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해 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들의 방어전략을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면서 해양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⁵²⁾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인근 주변국 중 그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적극 지원하여 양적·질적 세력팽창을 도모하려 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 패권전략 차원에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자기 세력권에 상존시킬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100만 이상에 달하는 군병력과 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변국 특히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⁵³⁾

둘째,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위협 가능성 및 미·일동맹관계에 기반을 둔 일본의 잠재적 군사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52) 중국은 그들의 일차적 관심인 변경방위 문제에서 출발하여 해양과 영공방위 문제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즉 중국은 해군전략을 연안 방어 전략으로부터 원양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는 한편, 2050년에 완수 예정인 「海軍力 整備 方針」을 확정하여 원양방어에 필요한 해군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旅大級(3900 톤) 구축함 2척과 江湖級(2000톤) 프리키트함 1척을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실전 배치하였고, 신형 원자력 잠수함과 미사일 탑재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의 신형 夏級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동해함대에 배속시켰으며, 21세기초까지 실전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40~50기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항공모함(4만 8천톤급) 건조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3~43.

53) 정영태,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국방논집」, 제26호 (1994) 참조.

이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북한의 안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지역 강대국 창출로 위협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세계 유일의 패권국 지위를 누리면서 국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 무기수출문제, 핵실험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미국의 「和平演變」 대상의 1호가 바로 중국이라는 인식이 중국대륙에 팽배해 있다. 향후 아세아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중국이라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빌미로 미국은 중국의 세력확대 노력을 차단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⁵⁴⁾

아울러 중국은 일본의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및 군사력 증대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대 일본 위협인식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중국 당국은 일본의 해군력 팽창이 「新 大東亞共榮圈」실현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원양방어에 필요한 해군력 증강정책을 서두르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직접적 대응 외에도 북한을 통한 우회

54) 신상진·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pp. 7~8.

적 견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을 위협하는 태도를 견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인 대일본 군사적 견제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소극적 차원에서 중국은 최소한 북한이 일본과 접근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대일 견제 또는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북지원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나. '주체성' 원칙하의 군사력 강화 지속 필요성

북한의 군사적 현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남조선 해방'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권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즉 북한의 군사력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도해 내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은 정부수립 이후 정권안보의 확대를 위해 무력적 방법으로 남한을 침략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적화통일의 당위성과 제국주의(특히 미국)의 위협을 과장,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민을 洗腦시켜 왔다. 즉 북한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대남무력적화통일의 당연성 강조를 통하여 군비증강

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는 곧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되는 유일지배체제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기능해 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은 그의 유일독재권력의 정통성을 주체사상에서 찾고자 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주체의 나라,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열망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를 실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이 바로 군사력 증강에서 나왔다. 사실상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 강대한 군사력은 그 자체로서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기반으로 한 '작은' 사회주의 강국정책 추구를 통하여 김일성 유일지배정권 안보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다.

즉 북한은 국민경제를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면서도 '자위'중심의 국방력 건설에 초점을 둬으로써 대외적(특히 제3세계 비동맹세력)으로 정치적 위신(political prestige)과 강대국(특히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autonomy)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인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완전히 차단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구소련의 대북 군사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중국과 구소련의 대북한 정치개입의 심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유일지배 정권을 생존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정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김정일 정권 역시 군사력 강화에 기초한 유일지배체제를 답습해 나갈 가능성이 짙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지도체계를 유지해 왔고, 이를 김정일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김정일 수령 옹립을 위한 이상화 및 제도화 등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현재 김정일은 유일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그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김정일 상징조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단절과 폐쇄 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동맹관계 유지 또는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새로이 형성된 신국제질서 구도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왔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보장의 요체인 북·중, 북·소동맹관계의 폐기를 강요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⁵⁵⁾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안보에 대한

5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근본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나아가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식 대로 살아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⁵⁶⁾고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인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 러시아, 구동구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과 무관하게 북한은 더욱 ‘우리식 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이들 사회주의권의 개혁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사상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1958년 스탈린 사망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처하여 북한이 사상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맹목적인 사회주의 연대를 단절하고 자주

56) 위의 글.

노선 선택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국방자위’ 노선을 견지하면서 군비증강노력에 박차를 가한 사실과 비교된다.

당시 북한의 ‘국방자위’ 노력은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이들로부터의 내부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동맹관계 유지에 북한의 대중국 군사관계에서 지금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구소련의 대북 군사적 지원 근거가 상당히 소멸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북한 군사적 지원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북한의 ‘2개의 중국’ 카드

현재 중국 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중·대만 통일정책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평화적 통일, 대만의 자치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一國兩制통일 방안이다. 중국은 1국양제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 및 이와 유사한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등과 같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관련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중국의 등소평체제하의 개혁·개방정책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⁵⁷⁾ 등소평 이후 중국은 총

57) 문홍호,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7.

체적인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4개현대화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내적인 안정과 더불어 대대만 관계 및 대미관계, 대일관계 등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필요로 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전환의 일환으로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도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⁵⁸⁾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금세기내 대만통일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군사안보전략을 공격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비록 일국양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무력적 통일을 배제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대만통일에 대해서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현재 등소평 이후 대내 안정유지와 단결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대만통일과 같은 국가주권 문제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중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약화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대만주권 수호와 같은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⁵⁹⁾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대만의 총통직선과 같은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만의 분리독립 활동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경태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만의 민주화 활동과 분리독립 움직임을 지원함으로써 미

58) 위의 책, p. 18.

59) 신상진, 「중국의 대내 정책과 대대만 정책 전망: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1~12.

국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현 중국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 李登輝 총통은 미국과의 F-16기 전투기 구매 약속(1992), 미국 방문(1995.6)을 통한 유엔가입 시도 등 중국 당국을 자극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국은 이등휘 총통의 이러한 분리독립 분위기 조성 활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간접지원 노력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대만 총통선거(3.23)를 앞두고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3.8~15), 해공군 합동 실탄훈련(3.12~20) 및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3.18~25)을 단행하여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강경정책을 폈다.

북한의 경우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대만과의 관계확대 조치로 대응해 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홍콩의 중국어 신문 「信報」는 북한의 「내부문건」을 인용, 북한이 “중국의 미흡한 원조와 한-중 밀착, 통일정책의 지지태도 변경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2개의 중국’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위협했다”⁶⁰⁾고 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북한은 대중관계에서 냉전시 「중·소갈등」카드를 이용한 것과 유사하게 ‘2개의 중국’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홍콩 「신보」(7.19)에 따르면 김정일이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20만톤의 식량지

60) 「세계일보」, 1996.7.20.

원을 올해초 요청했으나 5월 2만톤만 제공하겠다고 중국이 밝히자 이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대만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압력 카드로 대만과의 관계 개선 또는 밀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국제적 특히 동북아 주변국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2개의 중국’ 카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중국의 대 한반도 등거리 외교: 중국·한국관계 강화

중국은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⁶¹⁾ 중국 당국은 한반도에서 어느 한 측(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 측(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경직된 외교관계를 추구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보다 다원화된 국제관계를 신축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61) 문홍호, 「이붕총리의 방한결과 분석과 대중정책 방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12.

중국은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치·이념적 요소에 초점을 둔 외교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실리적인 외교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4개현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대내외 정책방향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우선적으로 대미·일관계 및 주요 서방국들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였다.

중국이 남한과의 수교와 경제관계를 포함한 여타 관계를 강화시켜오고 있는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군사관계 지속과 남한과의 실리적 경제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기존의 친북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하였다. 1991년도 한·중 무역액이 44억 달러, 1992년도 86억 달러, 1993년도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금년도 대중 수출은 작년 대비 33% 늘어난 1백 2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1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라면, 2000년대에 진입하게 되면 한·중간의 무역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⁶²⁾

62) 吳德烈, “한·중 바람직한 경협 방향,” 『문화일보』, 1996.7.3.

이외에도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1992. 9.27~30)과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1994.3.26~30)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봉총리의 방한(1994.10)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봉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중국은 민간항공우주협정, 원자력 협정, 민간항공기 공동개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중 민간항공운수협정 체결로 한국 민간항공의 중국진출을 위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한·중간 인적·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같은 한·중간의 교류와 협력은 비록 비정치·군사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정치를 포함한 여타 분야로의 협력 확대로 파급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비수교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경제협력과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출발하여 국교수립으로 연결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중간의 교류·협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간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중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한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의 입장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주장이라든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⁶³⁾ 등에 대해서도

63)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철수를 결정하고 정전체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중국이 이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지

북한편향적 태도를 보였다가 보다는 상당히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국 관계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중국과 북한간의 동맹관계는 약화 또는 변질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의 한국 접근에 대한 반발로 대미접근을 발전시킨다든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만과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전통적 북·중동맹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심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과 북한간 체제의 동질성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중국은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정치적 통제를 통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의 근거로는 첫째, 중국이 이미 14차 당대회와 1993년 14기 「3중전회」 등을 통해 「政治 左傾, 經濟 右傾」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점, 둘째, 현 경제개혁·개방노선에 대한 중국 지도부 내 의견대립이 크지 않다는 점, 셋째, 중국국민 대다수가 경제

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국은 평화체제전환 문제를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미간의 협상사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체제전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여지와 적절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적된다.⁶⁴⁾

반면 북한은 김정일 유일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추구하기 보다는 내부 체제단속을 위한 경직된 폐쇄체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비록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제한적인 개방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이 역시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체제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북·중동맹관계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모택동 사후부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현재 중국의 대북관은 더욱 부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의 나탈리아 바자노바 박사에 의하면,⁶⁵⁾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절대왕정 봉건국가’, ‘해프닝의 나라’라는 그들과는 이질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을 “더이상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중국인이 많았다고 한다. 북·중동맹관계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도 “하지만 거의 모든 국민은 여기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개입이라면 다시 중국의 개혁과 미래를 망치기 때문이다”라는 부정적 사족을 달았다고 한다.

64)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9~10.

65) 나탈리아 바자노바, “중국 더이상 북한 우호국 아니다,” 『서울신문』, 1996.5.23.

따라서 나탈리아 바자노바 박사는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갈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때문에 그들(중국·북한)의 정치·경제·전략적인 관심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탈리아 바자노바 박사의 판단은 중국의 공식적 여론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일반적 정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국과 북한이 체제적 측면에서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 양측은 기존의 사회주의 연대에서 상호 이탈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북·중 양측 간에 심화되면 될수록 전통적 북·중동맹관계는 형식상의 약속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2. 대러시아 군사협력관계

구소련 붕괴후 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게 된 러시아 연방은 엘친의 집권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동시에 러시아의 엘친 정부는 구소련 시대의 반서방 또는 대서방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친서방적 국제관계를 수립해 나감으로써 한국 및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구소련 당시와 같은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친한국 중심의 외교적 태도 변화가 생겨났다.

반면 러·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외부부 당국은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소련의 해체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이 재검토되어야 한다”⁶⁶⁾고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동맹조약 폐기 가능성을 일찍이 암시한 바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 러시아의 태도변화에 대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엘친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내적 불안정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친서방 노선에 대해서도 회의와 견제를 증폭시켰다.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엘친 정부는 대한민국 일변도의 관계발전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북한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다변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기존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협력관계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66)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가. 「러·북군사동맹관계」 폐기

지난 9월 10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새로운 조-러관계조약안을 보내 왔으며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러·북군사동맹관계는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⁷⁾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동맹조약에 대해서 다양한 뉘앙스를 지닌 언급을 해왔다. 로카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1992년 1월 평양 방문시 동맹조약의 유지조건으로 무력 불사용과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듬해 3월 쿠나제 전 외무부 차관은 옐친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자동군사개입조항의 해석을 유엔헌장에 맞게 엄격히 제한한다는 양해각서를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파노프 외무차관이 모스크바 인테르 팩스(Interfax)와의 회견(1994. 9. 27)에서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의 목표가 될 때 단지 이행될 수 있는 것이며, 침략의 본질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⁶⁸⁾

러시아의 Izvestiya紙⁶⁹⁾도 러시아 정부가 「조·소동맹조약」을 계속 유지하되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의 경우 북한의 안

67) 여인곤, “북-러 동맹조약 폐기 이후,” 「한겨레신문」, 1996.9.16.

68)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8 September, 1994, p. 9.

69) *Izvestiya*, 1992.8.13.

전보장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러시아 정부가 「조·소동맹관계」와 관련, 북한에 대해서 갖는 입장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소동맹관계」가 현실적으로 개정될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단절 또는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군사자동개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조약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 북한의 안전보장을 포함한 상호 군사협력관계의 구축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도 공격적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소동맹관계」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및 국제규범 준수,’ ‘유엔헌장에 맞게,’ ‘(북한이 받게되는) 침략의 본질,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 등과 같은 요구가 러시아의 이러한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러시아는 「조·소동맹」을 사회주의적 연대하의 攻守동맹적 성격에서 방어적 차원의 군사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소동맹조약」은 북한에게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25 남침과 같은 대남군사혁명 전략을 위한 사회주의 강대국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이 하나요, 일단 유사시(미국 또는 남한의 군사적 공격 등) 被侵에 대한 주요 방어세력으로서

의 의미가 그것이다.

북한은 「조·소동맹」을 방어적 의미에서 보다 대남혁명전략을 위한 공격적 지원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조·소동맹」 폐기는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 목표 달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안보환경 변화에 해당하는 것인 바, 북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조·소동맹」관계의 성격을 상당히 반영하는 대러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새로운 북·러군사협력관계

러시아는 변화된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에 의한 대외정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외교 및 안보의 구상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12월 1일에 발표된 「대외정책 문서」는 이를 잘 집약하여 표출하고 있다. 동 대외정책 문서에서는 아·태지역의 부상과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잠재력’(Unique Eurasian Potential)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아·태지역을 지목하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다원적 역내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역할 확보의 필요성과 모든 아·태국가들과 균형되고 안정적이며 독자적인 관계의 확립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동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동 지역의 안전보장 확보 책임을 미국과 분담할 의도를

강력히 피력하기도 하였다.⁷⁰⁾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정책의 원칙하에 동구 및 구소련 공화국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균형외교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993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의 교류·협력의 폭을 팽목할 만하게 신장시켜 오면서도⁷¹⁾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악화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러시아의 대북관계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엘친정부 초기 러시아 당국의 대내외 정책변화에 기인된 바가 크다.

그러나 1993년 후반기부터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1993년 8월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와 민간차원의 무역협회 창설 및 나진항의 국제무역항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9월에는 21개 러시아 기업들이 나진·선봉 하부구조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어획 쿼터, 북한내 합작수산공장 설립, 카스피해와 북해에서의 어업협력 및 북한에서의 철갑상어 양식 문제 등이

7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 4.

71) 특히 한·러간에는 경제교류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1993년 양국무역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하였다. 대러 투자면에서 보면 1990~1993년 기간중 한국은 총 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42억 달러), 프랑스(15억 달러), 독일(14억 달러)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는 바, 이는 일본(0.3억 달러)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토의된 러·북 어업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⁷²⁾

외교관계 차원에서 양국간 관계개선 노력을 위한 활동들이 재개되었다.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1994.5)하여 파노프 외무차관 등과 일련의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러시아는 “두나라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앞으로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을 표시”⁷³⁾함으로써 대북 외교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1996년 들어서도 러·북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방문 활동이 더욱 빈번해졌다. 예를 들면, 1996년 4월 비탈리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 일행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이뤄졌으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겐나디 셀레즈네프 러시아 하원 의장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셀레즈네프 하원의장은 공산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치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러 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러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러시아측의 적극적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 당국은 1961년에 체결된 「조·소동맹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기본조약 체결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개선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러시아가 제

72) 내외통신사 편, 「내외통신: 종합판」 (서울: 내외통신사, 1993. 10.1~12.31), pp. 134~135.

73) 앞의 책, p. 111.

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본조약의 성격과 내용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상호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담은 러·인도 조약과 같은 우호협력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제의한 기본조약이 군사적 내용을 완전 배제한 국가간 보편적 선린관계를 규정하는 순수 협력조약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는다. 러시아는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존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치·경제·군사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의 재선으로 러시아는 대북 협력움직임을 늦출 것이다. 반면 엘친 정권의 보수적인 대외정책의 영향으로 초기의 친서방 정책기조가 반서방 정책기조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한국편향적 대외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의회에서 공산당이 다수를 점하게 됨으로써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타협적 우방'으로 남아 있게 하는 대외정책을 표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국익 우선적 대외정책을 강화해 나갈 경향이 짙으며,⁷⁴⁾ 이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군

74) 심정욱, "엘친의 재집권과 한반도 안보," 「주간국방논단」, 제646호 (1996), pp. 5~8.

사·안보적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은 동북아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전략체계 차원에서도 인정되어 왔다. 즉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안보전략적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북한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접경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단절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체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가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면서 기존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직후 러시아가 우려한 것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북한체제의 붕괴위기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김일성 사망(1994.7.8) 이틀 후 엘친 대통령은 「모스크바방송」을 통하여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같은 해 9월에 엘친 대통령은 파노프 외무부 차관을 평양에 특사로 파견하여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케 하여 양국의 관계발전을 확약케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도내에서

군사·안보적 차원의 지원·협력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 11월에 발표된 군사독트린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주로 정치적 수단에 의해 쟁점들을 해결하며, 제국주의 안보정책 추진을 포기하고 안보정책 수행시 이데올로기적 원칙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⁷⁵⁾ 따라서 러·북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협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적 안보정책 차원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즉 구소련 당시 동맹관계 회복 노력과는 궤도를 달리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주북대사 내정자였던 데니소프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이 개시되어도 러시아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한·소수교 후 이미 전달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도발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며 러시아측의 사태평가 후 러시아의 헌법절차, 국제 조약상의 의무, 유엔헌장 등 국제문헌에 맞게 결정하겠다”⁷⁶⁾고 밝힌 바 있다. 데니소프의 말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한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부추키는 방향으로의 대북 군사지원은 거부한다는 점이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75) Stuart Kaufman, “Lessons from the Gulf War and Russian Military Doctrin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September 1993) 참조.

76) 「조선일보」, 1996.5.23.

전방위 선린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군사협력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한 대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미·러 양국은 1993년 9월 인사 및 정보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개월 후 중국과도 5년 기한의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북한과도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제 무기체계의 유지와 교육을 위한 러시아 군사기술 전문가의 북한 파견, 양국의 군사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대북한 무기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수출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1993년 11월 퇴역 잠수함 14척을 일본 무역회사의 중개로 고철용으로 북한에 판매하였다.⁷⁷⁾

비록 러시아가 고철용으로 북한에 무기를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이 “잠수함 특히 미사일체계를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⁷⁸⁾,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적 차원의 무기판매를 완전 단절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러시아는 첫째, 무기수출이 효율적인 외화획득의 방법이라는 것, 둘째, 「유럽내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의 준수를 위해 유럽지역에 배치한 재래식 전력의 이전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나 그 보다는 대외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겠다는

7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9 January, 1994, p. 12.

78) *Moscow News*, No. 27, 8~14 July, 1994, p. 4.

것, 셋째, 기존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고려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제3세계국가로의 무기이전에 대해서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대북 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⁷⁹⁾ 더 나아가 러시아는 대외무기판매를 통해서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해와 연계시켜 중동 및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자 할 것이다.

3. 대미 군사적 접근 확대

북한은 미주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으로서 알려진 한호석의 논문을 통해서 그들의 단계적 대미 군사접근전략을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그의 논문 내용이나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에 올려진 한호석의 논문을 보면 “통일의 당위와 통일실현의 기회, 그리고 통일국가의 선택,” “조·미관계개선의 기류를 전망한다,” “북(조선) 식량문제 분석에 대한 재검토,” “한(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미국의 확장정책과 한(조선)반도 핵외교” 등이 있

79) Hyon-Sik Yon, “The Russian Security Interests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mmer 1994), pp. 162~163.

는 데, 이들 논문 모두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호석의 논문을 통해서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방법과 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호석은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한(조선)반도의 평화는 북(조선)과 미국사이에서 고위급 정치·군사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상호안보협약체’로 정착시켜가는 점진적, 단계적 과정에서 수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호안보협약체’를 “평화협정(조약)체결로 가는 복잡하고 긴 협상과정에서 거쳐가는 ‘중간적인 조치’”라고 정의하였다.⁸⁰⁾

또한 그는 북한이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미협상의 내용과 성격을 단순히 ‘정전체제 대체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군사·경제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안보문제’로 확대하여 ‘상호안보 대화’를 요구하고”있다고 함으로써 ‘상호안보협약체’가 정치·경제·군사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역시 군사문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 당국은 1995년 9월 19일 부터 1주일 동안 방북한 미국의 셀릭 해리슨을 통하여 “북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 하루 이틀에

80)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인터넷 자료, 1996.4.3, p. 9.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체계’(New peace mechanism)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주한미군주둔을 용인하는 대신, 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계’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평화체계’란 “먼저 ‘조·미 상호안보협약체’를 구성하고, 이 협약체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이중구조의 평화 보장안을 뜻한다”고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은 현재 조건에서 조-미평화조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화조약체결이 조-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⁸¹⁾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우선적으로 ‘조·미 상호안보협약체’를 구성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통한 정전협정체계를 와해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제1의 대미 군사적 접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한호석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안보대화’가 시작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81) 한호석, “개입·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동향,” p. 7.

“미국은 지난 냉전시기 동안 북(조선)을 망나니 정권(rogue regime)이라고 비난·공격하면서 북(조선)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여 적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봉쇄·대결전략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하고, 북(조선)을 겨냥한 공격의지를 내포한 모든 군사훈련, 군비증강을 포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탈냉전적 전략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질서를 탈냉전시기의 전략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개입-확장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상호기본조약의 기본성격을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 조약을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포괄적인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추구하는 법적 장치의 일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역내의 포괄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으로 그 존재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⁸²⁾

또한 그는 “북(조선)이 ‘조·미안보대화’ 창설구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군비의 감축이다”라고 하면서 “북(조선)이 조·미안보대화를 통하여 군비감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북(조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조선)반도의 군축문제를 평화체제 수립론과 통일국가 수립론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논리적 뒷받침을 받는다. 북(조선)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군축문제는 조국통일

82) 위의 글, p. 9.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⁸³⁾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북·미안보대화’라는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여기에서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 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군축 문제 등을 협상하면서 한·미군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북·미안보대화’관계 구축을 통한 대미 군사적 접근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주한 미대사 레이니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 연설(1996. 5.11)⁸⁴⁾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동 연설에서 “반세기 동안 남북한 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억제(deterrence)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하면서 “억제에 바탕을 둔 이 관계는 대단히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청와대 습격, 아웅

83) 위의 글, p. 10.

84) 제임스 T. 레이니, “남북한: 억제(deterrence)를 넘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문, 1996.5.11.

산 폭탄테러, 그 밖의 테러 행위, 프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가장 최근 들어서는 93년과 94년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었으며, “이 억제력은 남북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어 주었”을 정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효율적이었음을 솔직히 피력하였다.

그런데 레이니는 억제전략은 “그 수명이 다된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억제는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지만 “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문제는 북한의 약화와 절망”이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오늘날 한반도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를 억제력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구축조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려 결국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의 대북한관을 살펴 보면, 구소련이 붕괴함

에 따라 북한은 주요 후원자이자 동맹국인 동시에 큰 교역상대를 잃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를 거의 중단해 버린 결과 북한은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동독, 루마니아, 구소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필요한 개혁·개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반면 남한과의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막다른 상황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군사적 도발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북한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국방차관보였던 나이(Joseph S. Nye, Jr.)도 “예를 들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건물의 12층에 사람이 갇혀있다고 치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 뛰어내려서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뛰어내릴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임을 언명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적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

이다.⁸⁵⁾”라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미의회조사국 연구원 닉쉬(Larry A. Niksch)는 “미행정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에 행사하고 있는 정책을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고 표현해 왔다”면서, “포용정책은 타정부와의 접촉, 회합의 과정을 의미하며, 때때로 최소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확대해 주는 과정을 의미”하며, “포용의 목적은 타정부들에게 미국의 선의(good will)를 확고히 보여주고, 미국이 부정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불식시키며,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조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⁸⁶⁾

따라서 그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예상되는 변화-붕괴든 개혁이든-가 일어날 때까지 위험을 막고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포용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러한 정책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장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한·미유대를 강화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다”⁸⁷⁾고 함으로써 미국의 포용정

85) 조지프 나이, “조지프 나이 칼럼,” 『경향신문』, 1996.5.10.

86) Larry A. Niksch,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제5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71~72.

87) 위의 글, pp. 77~78.

책이 정전체제 전환문제를 포함한 대북한 군사문제의 직접적인 협상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닉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솔직히 털어내 놓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확대는 한국의 기본적 안보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군사적 이슈를 놓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선거가 끝나면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⁸⁸⁾

이같이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포용정책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하여 균형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유지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이원적 평화유지 체제」(미국과 북한의 군간부들로 구성된 북·미군사위원회가 한 축이 되고 또다른 한 축은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가 되는 평화체제)⁸⁹⁾가 미국내에서 설득력있게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88) 위의 글, p. 80.

89) 셀리그 해리슨, 「한겨레신문」, 1996.5.13.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사대화를 확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과의 핵협상을 통해서나 미사일 협상, 미군유해송환협상 등에서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 미·북간 장성급회담 개최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도록 미행정부(커트 켈벨 국방차관)와 주한미군사령부(게리 럭 사령관)가 요청해 왔으며, 그 내용은 북한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을 강화해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는 북한의 외교적 지렛대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미국·북한간 협상에서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 및 대남외교적 공세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은 오랫동안 전면핵안전협정 체결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면서 핵문제를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군사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데 최대한 활용한 결과, 미군핵무기의 철수 선언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핵' 을가미를 씌우게 됨으로써 최초의 군사적 이득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NPT탈퇴라는 강경수단으로 수차례에 걸친 미·북고위급 협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단계 4차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는 쌍방간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同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군사적 요구에 대한 1차적 보장을 이끌어 내었다.

먼저 북한의 핵불사용 등의 기존 요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한 보장 결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지지 결의'는 남한의 T/S 훈련 중지, 그리고 향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관한 요구 관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북양측은 1994년 10월 21일 「미·북 기본합의문」과 부속 비밀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북·미핵협상의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동 합의문에서 북한은 그들의 핵개발 동결약속으로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등과 같은 수십억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상배치 핵무기를 모두 철거시키는 한편 미국을 극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에 따라 대사급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켜 나간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군사문제를 포함한 제반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미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그들의 “경제난을 개방정책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구책이 아니라 한(조선)반도 전체의 ‘민족문제’인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통일문제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 놓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의 성과를 추구하는 데 있다”⁹⁰⁾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미·북기본합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북·미간 직접적인 군사협상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현재 북한 핵카드의 유효성은 북·미기본합의 도출로 상실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2가지 측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대미 군사적 요구사항을 결정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보장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제네바 합의문에서는 특별사찰에 준하는 사찰⁹¹⁾의 시점을 「경수로 원자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핵 규명 활동은 빨라야 5년 후에 가서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북한의 여러가지 핑계로 연

90)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p. 4.

91) 제네바 합의문에 「경수로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 IAEA 안전조치 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북한이 실질적인 특별사찰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장될 수 있으며 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한 정의와 범위설정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미국과 협상을 벌임으로써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 보관, 5MW, 50MW 및 200MW 원자로의 가동 및 건설중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등 핵동결조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의 해체 등 완전한 동결은 경수로 완공시점으로 하여 거의 10년간 핵시설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추가적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플루토늄생산 재개를 위협함으로써 10년 가까이 대미협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카드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⁹²⁾ 미국이 잠정적으로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고 있을 경우 북한은 이러한 핵카드 위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또다른 외교적카드로 미사일 개발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76년부터 구소련으로부터 SCUD-B 미사일을 도입, 자체 개발하여(사정거리 500km) 현재는 연간 약 100여기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

92) 윤덕민, “대북핵협상 경과와 대책,” 「전략연구」 (서울: 전략문제연구소, 1994), p. 48.

를 개발한 상태이다. 이는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동경과 북경 까지도 사정권내에 들어 있어⁹³⁾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⁴⁾ 또한 북한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 미사일 완제품과 부품을 수출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와도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⁹⁵⁾ 워싱턴 타임스지(1996. 6. 21)는 CIA비밀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지난 3월과 4월 사정거리가 5백Km 이상인 스커드 C미사일 관련 부품들을 이집트에 제공하는 등 중동국가들에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⁹⁶⁾

현재 미국은 미사일 비확산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북한을 끌어들여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제동을 걸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1차 미사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중동지역 수출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2차 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이집트가 북한이 제공한 스커드 C미사일의 주요부품들을 이용하여 자체적

93) 전 미국국방부 탄두미사일 방위국장 멜컴 오닐 중장은 “북한은 미국의 정보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대륙을 공격권에 포함하는 미사일을 조기보유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996.6.16.

94)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3), p. 58.

95) 「중앙일보」, 1996.6.9.

96) 「세계일보」, 1996.6.23.

으로 미사일 생산을 기도한 데 대한 제재로 연간 21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 삭감등을 강구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미사일 확산방지법은 MTCR 규정을 위반한 국가나 회사에 2년간 국방·우주항공분야의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등 제재수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수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개발 문제가 대미 군사접근 카드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 미국은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미 군사적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 미군유해송환 협상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유해 문제에 관한 회담을 지난 1월에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5월 뉴욕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동 합의문에서 “양 측은 6월 상반기 중 추후 결정될 장소에서 공동발굴 작업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이같은 기술적인 회동이 연내

공동발굴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양국은 “이번 합의가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믿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⁹⁷⁾

여기에서 북·미 미군유해협상이 갖는 2가지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하나는 북·미 양국간의 빈번한 접촉이 예상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1988년 부터 판문점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북한과 유해송환협상을 벌인 이래로 북한으로부터 1983, 1984년에 162구를 포함해 총208구를 송환받았다. 그런데 이번 미군 유해송환협상은 미군군사정전위 채널이 아니라 북·미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접촉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유해송환협상의 북한측 수석대표는 지난 1월 중순 하와이에서 열린 1차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군축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외교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김병홍 소장대리이다. 이밖에도 판문점 대표부 소속 박임수 대좌 등 군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내에서 전쟁포로와 실종미군 문제를 전담하는 제임스 월드 부차관보가 맡았다. 또한 유엔사 군사정전위비서장인 움즈 대령이 포함되었다. 협상장소 또한 판문점이 아닌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바로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적인 군사대화 채널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97) 「동아일보」, 1996.5.11.

이와같이 미군유해송환협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북·미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대화채널이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실종미군유해의 송환문제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선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해송환 관련, 북·미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북·미간 관계진전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유해송환관련 북·미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대북 군사적 접근의 기회를 한층 더 넓혀 줄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라. 한국의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 원칙 견지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 중의 하나는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과 관련, 한국정부가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2년 2월 19일 남북한간에 합의·발효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며 다각적인 제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의 체제와 이념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비로소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⁸⁾

98)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통일원, 1992), pp. 30~32.

한국은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절 51돌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이 약속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⁹⁹⁾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16일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4자회담의 핵심은 한반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가 중심이 되고, 이를 중국과 미국이 담보하는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은 한 조찬 간담회에서 “남북한간의 양자회담이 중요하고 미국과 중국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절대로 직접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즉각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¹⁰⁰⁾고 밝혔다.

99) “김대통령 광복절 51돌 경축사,” 『서울신문』, 1996.8.16.

100) 『한국일보』, 1996.4.19.

또한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4자회담은 처음에 4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점차 남북이 주체가 되는 「4-2」 방식”이며 “4자회담 초기에 정치적 입장을 조율한 뒤 남북 당사자 차원의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¹⁰¹⁾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4자회담 제의에 있어서도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한을 배제하는 어떠한 한반도 관련 안보대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으며, 쌍방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고 있고 ‘당사자 원칙’을 버리고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시키면서 대미평화협정공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남한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 러시아 및 중국의 견제

러시아는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구소련과는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에 있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서유럽

101) 「한국일보」, 1996.4.18.

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덜 느끼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NATO, WEU 등 서유럽 군사동맹기구가 중동부 유럽국가들까지 흡수하게 될 경우 서유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의 안보전략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과거 러시아와 군사적 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크게 신장시켜오고 있는 바, 러시아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역시 일본 및 한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요인의 하나인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하는 등 관계정상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4자 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의 발렌틴 모이세프 한국과장은 “4자 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결코 동정적이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인 해결에는 반드시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고¹⁰²⁾” 밝힘으로써

러시아가 소외된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직후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은 「네자비시야마 가제타」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하여 “미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국이 되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일변도의 외교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외교를 적극 펼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러시아는 북한이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뜻이다. 데니소프는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4자회담 전에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당사자들의 자제와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등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협정들이 당사자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¹⁰²⁾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 당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은 북·미 군사적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02) 「세계일보」, 1996.5.26.

103) 「조선일보」, 1996.5.23.

중국 역시 북·미 군사적 접근에 대해서 러시아와 유사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통한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며, 한반도문제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좌우되는 것에 반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 군사적 접근과 한·미관계 갈등 심화로 인한 남한의 군사력 약화가 북한의 무력도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의 핵심은 직접적인 대미접촉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식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상호불신이 가까운 시일내에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기에 구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체결의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체제의 지속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명분을 확보해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즉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 메카니즘으로서 정전체제가 당분간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북·미 평화협정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탈냉전 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¹⁰⁴⁾

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관련, 중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유지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더 이상 주둔의 명분이 없으며 대만 및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과 역내 영향력 확대 등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¹⁰⁵⁾ 그러나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중국은 쉽사리 북한이 요구하는 시기 및 방식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견해가 북한의 주한미군

104)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56.

105)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아 질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90.

무조건 철수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군사적 접근에 있어서 중국의 견제 카드가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설득력을 지닌다.

바. 북한의 대내 경제적 요구

1981~1989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불변가격 기준)은 3.2%이며 1990년 이후에는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1994년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불변가격기준으로 1989년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심각한 농업생산성의 감소와 에너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4년의 곡물생산량이 412만 5000톤으로 전년 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간 곡물 총수요 670만톤에 비해서는 250만톤 이상이 부족하며 원유도입량은 정유 능력인 350만톤의 1/3에도 못미치는 91만톤에 불과했다. 발전량도 231억KWh에 그쳐 1990년의 277억 KWh에 비해 16.6%나 감소하였다. 1995년에도 대외교역이 전년 보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곡창지대를 포함하여 북한 전역이 큰 수해를 입는 등 경제여건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¹⁰⁶⁾

북한이 이러한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106) 전홍택,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p. 65~66.

추구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북한은 개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외국의 경제지원을 끌어내고, 내부적으로도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재분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정책이 체제안보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나진·선봉 경제특구건설 노력이 바로 체제수호적 대외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서방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확대, 그리고 대외경제적 지원 획득이며, 가장 손쉽게 기대할 수 있는 외부투자 또는 경제지원국으로는 미국과 남한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직접대화에만 매달릴 경우 남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경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대북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대적으로 경제적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은 오히려 남한이 그들의 대북 포용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적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부정적인 한 대북경협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여 경제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한을 배제하는 대북 군사적 접근정책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거나 완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대일 적대적 군사관계 지속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성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1993년 4월 미국방부가 미·일 방위산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태평양 미사일방위연구소(WEST PAC)」는 북한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내 원전 등 7개 시설·지역에 노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침을 개시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전해졌다.¹⁰⁷⁾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의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은 동북아 지역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둔 미공군은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 가상훈련 실시 등 최대한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한국군 관계자들은 1백 20만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이를 분쇄할 수 있으나 군인과 민간인 생명이 큰 희생을 당해야 할

107) 「중앙일보」, 1996.5.6.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 주일미군의 훈련은 여하한 지역분쟁에도 대비해 실시되고 있으나 특히 북한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라고”¹⁰⁸⁾ 밝혔다.

1996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은 핵개발 의혹 외에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고 있어,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¹⁰⁹⁾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망명한 최주환 인민무력부 상좌와 현성일 잠비아 대사관 3등 서기관, 차성근 노동당 공작원 등은 마이니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의 표적은 주일미군”¹¹⁰⁾이라고 밝힘으로써 미·일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일 군사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높여 주었다.

향후 북한의 대일 군사적 적대감은 일본이 4자회담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층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북한이 대일 비난공세를 강화하고¹¹¹⁾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북한은 직접적으로 북일

108) 「세계일보」, 1996.6.8.

109) 「조선일보」, 1996.7.20.

110) 「서울신문」, 1996.5.10.

111) 대표적으로 “주체념은 간첩을 그만두라” (「로동신문」, 1996.7.30), “괴뢰들의 손탁에 놀아나는 일본외교” (「중앙방송」, 1996.7.18) 등에서 북한은 일본의 4자회담 지지 발언에 대한 강한 비난을 가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수교를 겨냥, 대일 비난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당국으로 하여금 대일수교 협상에 조속히 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일 접근노력과 군사적 적대감 표현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제V장 결론: 종합전망 및 평가

북한은 일찍부터 진행되어 온 권력승계 작업으로 인하여 김일성 사후 대두될 가능성이 짙은 권력투쟁 등의 정치적 혼란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권력승계자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내부적 공고화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에서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로 그대로 옮겨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권력승계체제는 과도적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이 舊政權(김일성 정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김정일 역시 '唯一神'과도 같은 아버지 김일성의 업적과 위대성을 강조하지 않고는 그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바, 기존의 통제와 폐쇄를 기반으로 한 비탄력적인 권력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 김일성이 유일독재 권력 강화 과정에서 추구해 온 정권안보 중심의 정책수립 패턴을 김정일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권안보 중심의 정책수립 방향은 북한의 대외군사 관계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주변 4대강국과의 군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중 군사관계

중국은 북한이 독자적인 주체세력으로 성장하여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합되거나 내부체계의 혼란으로 자체 붕괴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의 대내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중 양 측은 형식적으로나마 전통적 혈맹관계에 기초한 '盾齒의 관계'로서의 밀접함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관계에 기초한 교류와 협력의 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을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대북 지원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우선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식량원조라든가, 에너지 원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군사적 지원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단, 유사시 군사적 안보에 대한 보장을 공식적으로 과시하면서 군수품 또는 군사기술 지원과 같은 대북원조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성장하여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

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 군사력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로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의지를 자제하고 경제발전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중국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대북 군사지원이 밝혀질 경우, 이는 중국의 대미, 대일 특히, 대남한관계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인 바, 중국은 가능한 한 이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간의 동맹조약인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7.11)을 계기로 방북했던 羅幹 국무원 비서장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무상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공산권 국가간의 무역관행이었던 ‘우호가격제’를 부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향후 5년간 북한에 식량, 석유 등을 다량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²⁾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해함대사령관 王繼英이 인솔한 해군 함선 편대를 남포항에 입항시켜 북·중간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시위하기도 하였다.¹¹³⁾ 「信報」에 따르면, 김정일은 주창준 북경 주재 대사를 통해 미그 21의 개량형인 중국제 「섬-7 II」 전투기 12대와 40기의 미사일 및 3척의 미사일 쾌속정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중국측으로부터 묵살당했다는

112) 「조선일보」, 1996.7.22.

113) 「조선일보」, 1996.7.22.

것이다.¹¹⁴⁾ 또한 러시아 방송(1996.6.26)은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인도네시아 방문길에 나선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차수)이 북경 체류 중 군사분야에서 중·북 쌍방간 협력을 증진시키로 합의했음을 밝힌 바 있다.¹¹⁵⁾ 이 역시 양국간의 새로운 실질적 군사협력에 합의했음을 밝힌 것이라기 보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군사협력의 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은 그들의 대인방국 정책¹¹⁶⁾의 일환으로 먼저 북한을 중국식 스타일의 정권으로 유도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으로 중국에 비도전적 혹은 최소한 적대적이지 않은 '완충지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차원에서 구소련과 같은 대안적 지원세력을 결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수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북·러 군사관계

향후 러시아는 「두개의 한국」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리 위주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 예상되는 바, 대북한 접근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대

114) 「조선일보」, 1996.7.22.

115) 「조선일보」, 1996.7.20.

116) 나창주,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문제」 (서울: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1976), p. 128.

남한 편향적 외교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당국은 그들이 「북한」 카드를 잘 활용했더라면 한·소 수교 당시 한국정부가 구소련에 약정한 30억 달러 차관지급 중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미 핵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에 있어서 '러시아형 경수로' 요구 관철을 위해서도 「북한」 카드가 유효했을 수도 있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4자회담 제의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것 역시 러시아의 「북한」 카드 상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많다. 러시아의 한국관련 외교관들은 “4자회담은 프로파간다(선전)다. 회담은 잘 안될 것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¹¹⁷⁾ 따라서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를 정상화시켜 한반도문제관련 논의에서 주도권을 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안보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적극 개입전략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가는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이미 1993년부터 친서방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117) 「중앙일보」, 1996.5.2.

실리적 민족주의를 추구해 왔다. 지난 6월(1차투표)과 7월(결선투표)에 치루어진 러시아 대선에서도 우파 민주개혁 인사로 분류되는 그레고리 야블린스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의 러시아 애국주의와 반서방 정서를 반영한 ‘강력한 러시아’ 구호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서 향후 러시아 정치·외교의 보수화 조짐이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가능한 한 북한을 그들의 군사적 영향권에 두려는 대북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나름대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러시아로부터의 대내적 간섭을 배제하고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 엘친 정권은 대북한 군사적 지원을 구소련 당시처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시혜적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기존의 동맹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간 협력적 차원으로 변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군사기술 또는 장비를 지원받되 여기에는 일정한 비용지불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기존의 대북한 군사관계를 고려하여 약간의 시혜적 차원의 군사지원을 완

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리·북군사관계는 「느슨한」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군사협력관계의 형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북·미, 북·일 군사관계

미국의 대북 접근전략은 한마디로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연착륙(soft-landing)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약화’와 ‘절망’으로 한반도 안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대북한 신뢰구축 조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한반도 안정의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보다는 북한의 핵문제·미사일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비록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1994.10.21) 이후 중유제공 및 경수로 지원 등의 대가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데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핵동결 약속 파기’ 카드를 대미 위협용으로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개발 관련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서 북한의 일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미 직접적인 안보대화채널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켜 대남 우위의 공격적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게 군사대화채널 구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은 자체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찾는 경향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 북한의 핵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더욱 부추킬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일본은 북한의 대북 적대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차원의 대북접근을 강화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4. 평 가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북한이 유지해 왔던 북방 3각동맹관계가 완전히 와해되기는 어렵고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

의 형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중·러 군사관계는 북한이 추구하는 공격적 대남 군사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군사정책에 필요한 대외 군사역량 확보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미 군사적 접근 강화를 통한 남한의 군사역량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은 핵협상, 미사일협상, 미군송환협상 등 외교적 카드를 이용하여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할 수 있는 북·미 안보대화축 구성을 시도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 이완, 한국의 군사역량 약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일본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여론이 팽배해질 것인 바, 북한의 대일 군사적 태도는 보다 적대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짙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의교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극동문제연구소 편. 「北韓全書」 上卷.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내외통신사 편. 「내외통신: 종합판」. 서울: 내외통신사, 199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0~1991」.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0.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3.

드레아스 크라체크 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서울: 중원문화, 1990.

문홍호. 「이봉총리의 방한결과 분석과 대중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와 동북아 질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중국의 대내 정책과 대대만 정책 전망: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규열. 「남북한 군비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종학 편저. 「군사전략론」. 서울: 박영사, 1992.
- 이홍구.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6.
- 정광하.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_____ .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하여」. 서울: 국방대학원, 1990.

정진위. 「北方3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황성모 외. 「北韓體制研究」.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Charvin, Robert & Marouani, Albert.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Liska, George. *Alliances and the Third Worl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Modelski, George. ed., *SEATO: Six Studies*. Melbourne: F. W. Chesire for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62.

Kaplan, Morton A.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2nd ed. New York: John Wiley Sons, 1967.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2. 논문

고영환.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대한민국 국방부. 「'95 북한정세세미나」, 1995.

- 구영록. “한국의 안보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나창주.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문제」. 서울: 한양대학교중소문제연구소, 1976.
- 대한민국 국방부. “1990년대 북한-소련관계연구.” 3차회의 평가자료, 1988.
- 래리 니쉬.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심경옥. “엘친의 재집권과 한반도 안보.” 「주간국방논단」. 646호, 1996.
- 윤덕민. “대북핵협상 경과와 대책.” 「전략연구」. 서울: 전략문제연구소, 1994.
-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개념과 변천과정.” 「국가전략」. 제1권 제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전홍택. “북한경제반세기의 평가.”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정영태.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국방논집」. 제26호, 1994.
- _____.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민수화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편.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정은숙. “아·태지역안보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제임스 T. 레이니. “남북한: 억제(deterrence)를 넘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문, 1996.
- 中川八洋. “「労働 - 號」を迎撃できるが.” 諸君. 第25卷 第8號, 1993. 8.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통일원, 1992.
-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 (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방향.” 「인터넷자료」, 1996.
- Hyon-Sik, Yon. “The Russian Security Interests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mmer, 1994.
- Huh, Moon Young and Jeung, Young Tai. “External Policies and Relations.”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 Solaz, Stephan.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July 12~21, 1980*.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Stuart Kaufman, "Lessons from the Gulf War and Russian Military Doctrin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September 1993.

3. 기 타

「내외통신」.

「동아일보」.

「로동신문」.

「민주조선」.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9 January, 1994.

_____. Central Eurasia, 28 September, 1994.

_____.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_____.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Documents officiels de l'assemblee generale de l'Organisations des Nations Unis, Annexes, Point 21, 15 ème session (New York, 1960~1961).

Moscow News, No. 27. July 8~14, 1994.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理想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北韓의 對 周邊4國 軍事關係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치는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北韓과 周邊4國의 軍事關係

研究報告書 96-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7-9288, FAX: 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